

# 柳 “지지층은 증축 원하는데李大통령은 재건축”... 與 당권주자 내홍 조짐

(유사민) 김민석 “柳, 자신감 과잉...李 비판 절제”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28일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보수층의 증축’을 바란던 민주진영 핵심지지층을 이탈시키고 있다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이른바 ‘증축 재건축론’에 휘말리면서 당권주자 간 내홍 조짐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 지침으로 포용·통합을 강조하며 중도 보수 화장을 나신 데 대해 “이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왔던 것은 중도·보수 쪽으로 한 층 더 옮긴 증축”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재건축하러 갔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6일 ‘김이준 유튜브’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이라며 이가 이기 않았다.

이들 두고 ‘신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치면 안 된다’며 강성 지지층을 쫓기는 정권대 전 대표의 ‘집토끼론’과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가 따르면서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 등을 자극하는 모양새다.

실제 김 총리는 유 전 이사장이 이 대통령 지지를 하라던 원인을 ‘핵심 지지층 이탈’로 분석한 데 대해 “내가 어떤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식의 과잉된 자신감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절한 절제가 필요하다”며 “과정을 때는 과거 연(亂)으로(이러한) 경우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전날 경기 양평군에서 열린 민주당 6.3 지방선거 여성 당자 대회 워크숍에서 “이 대통령이 이끌었던 민주당은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그리고 무엇보다 이기는 민주당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약간 뼈뺐했다”며 “자칫 잘못하면 중원을 다시 놓칠 수 있고, 중원을 놓치면 앞으로는 이기기 어렵다”고 호렷했다.

이어 “장기적인 성과와 승리가 아니라”며 “이러다가 계속 야당을 하게 되는 것이야 나나는 불안이 겹쳐하는 상황이 온 것”

이라고 거듭 지방선거 결과를 평가했다.

또한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세 번의 (대선)승리가 있었지만, 정권 재창출까지 한 것은 김대중 정권 딱 한 번”이라며 “이제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회복해야 한다”고 독렷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의 “체코전에서 승리할 때 환한 일색이었던 홍명보 감독이 (남아공 패전 뒤) 인정사정없이 비판받고 있다”며 “모든 지도자는 책임지는 것이 순리”고 충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 의총에서 합의로 결정

된 사항이고 김민석 총리가 정리(정무부는 내지 않았으나) 국회가 앞서서 처리해 달라” 했으면 잘 된 결정인데 왜 새삼스럽게 이슈화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정철래 대표에게 세우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이처럼 불필요한 이슈를 만들고 우리끼리 싸워 내리세력 유리하게 만드는 일은 안 해야 한다”며 “당 대표가 왜 민주당을 망하게 하면 안 되나 새 분(김민석 총리·정철래 정 대표·송영길 의원) 모두 포함 단결의 비전을 제시하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철래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은 이날 말이나 오는 7월초 새 당권 전선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민 기자 jay@siminilbo.co.kr

## 李대통령·文, 1일 오찬 회동 홍익표 “취임 직후부터 추진”

오는 7월1일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오찬 회동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정 진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동은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왔다. 단, 대한민국 정세화를 위한 속 가늠 국정 일정 속에서 그동안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정을 조율해왔고 마침 다음주 수요일(7월1일) 두분의 일정이 맞아 오찬을 함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년의 성과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다다른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께서 일상에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문 전 대통령과의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그리고 국민정부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치 대통령으로부터 고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 대통령은 7월1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지난 25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지난 5월23일(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마주한 이후 30일만에 이뤄진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이다. 특히 청와대에서 회동하는 것은 이 대통령 취임 뒤 처음이다. 단,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국외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도 자리에 함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일정은 8월17일 실시되는 민주당 분당 경선을 앞두고 세력 간 분열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지자를 통합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주당내 경쟁과 갈등에 대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다. 원수 싸우듯 하지 말아달라”며 “숨어서 모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일 뜻이 싸우다 진짜 죽임 어떻게 하냐”라고 지적했다.

전용희 기자 dra@siminilbo.co.kr

## 민주 “선관위 소재로 정쟁만 하나” vs 국힘 “본질 흐리는 정략적 물타기 혈안”

‘선관위 개혁’ 거센 공방  
與 “野, 개헌 논의 맹목적 거부”  
野 “개헌론은 시선 돌리기 꼼수”



청년 당선인 워크숍 참석  
당 청년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정철래 전 대표가 28일 경기도 광주시 근저리미르호텔에서 열린 민주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가 선관위 개혁 문제를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최보로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위협받는 초유의 국가적 참사 앞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본질을 흐리는 정략적 물타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맹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은 그동안 선관위의 고질적 부패와 정권교체 유책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제도 탓, 헌법 탓으로 돌리며 교묘하게 방탄막을 쳐 왔다.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에게 기대었다는 듯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 해체를 들고 나와 마치 대단한 개혁이라도 하는 양 유년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개헌은 역시 집권의 실정을 덮고 자신들과 관련된 여권인 선관위 카르텔을 비호하려는 정략적인 ‘시선 돌리기’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선관위 내부에서는 정방위적으로 증거 인멸과 각종 불법·위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선관위의 부패 근절은 비리와 유착 관계는 강제수사가 없는 국정조사만으로 는 절대 밝혀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탕까지도 그동안 선관위를 비호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현 정권 하의 경정 합동수사본부 조사 역시 국민적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현행 구조를 낫는 말장난이 아니라 6.3 사태 이후 지금까지 범법의 흔적을 지우는 선관위의 품수를 차단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노력과는 별개로 특검을 통한 강력한 증거 수사를 즉각 진행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진상 규명을 통한 전면적인 강제 수사 를 끝까지 회피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스스로가 선관위 부패 카르텔의 공범이자 한몫속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통해 선관위의 비위를 백일하에 드러내고 무너진 선거 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을 하자는 건가, 선관위를 소재로 정쟁만 하자는 건가”라고 꼬집어 질타

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어제(26일) 민주당 선관위 개혁 TF가 발표한 개혁안을 두고 ‘개헌법령안 고치는 ‘가능한 범위내의 별다른 처벌’이라는 이번 사태와 별다른 무는 온전치도 드러낼 수 없다”며 “민주당의 근간인 국민의힘을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칭하는 제도개혁에 어떠한 성격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도대체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워서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제기한 개헌 논의마저 맹목적으로 거부하느냐”며 “‘개헌’이라는 단 어만 나오면 이토록 발끈하면서 정쟁으로 물가하는 이유가 무엇인 지 궁금하다. 혹시 후고고고 정치 공세 소재로 활용하려던 선관위 합정권 침해 사태가 개헌으로 끝

플하게 해결될까 두려워선다. 이번 지난 5.18 민주유혹운동 정신을 헌법 정문에 수록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명문화하기 위한 개헌안을 발족 잡이 주저했었던 것과 같이 국민의힘의 일관된 탈리당파 때문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진정 국민의 합정권을 지키고자 한다면 민주당 개혁 방안을 채택하는 논쟁만 낼 것이 아니라 개혁에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정책적으로 책임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라”며 “국정조사에서도 어떤 민주당 의원 발언을 사실체곡하는 데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제대로 된 집의로 진상규명이 최선은 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용희 기자 dra@siminilbo.co.kr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로제 불법 반입 급증  
국가·반입경로별 통관 관리 모니터링 강화해야”

정일영, 관세청 자료 분석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로제 재를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물에 5월까지 비만치로제 통관보류 건수는 총 3441건으로 지난 2025년 연간 통관보류 건수(2411건)보다 177%(2.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용의약품안전처 위해 의약품 지정 규정에 따르면 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 등 비만치로제는 수입업자가 아닌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할 수 없으며, 적발시 통관이 보류된다.

그러나 저명한 가격 등을 이유로 해외직구를 이용하거나 해외여행 중 구매한 뒤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제우편을 통한 해외직구가 크게 증가했다.

국세우편 통관보류 건수는 지난 2025년 1107건에서 올해 5월까지 2940건으로 166% 증가했으며 불과 5개월만에 지난 2025년 연간 규모인 2,740건에 달했다.

국가별 반입 경로를 살펴보면 특정 국가 출발 현상이 뚜렷했다. 올해 국제우편 통관보류 2940건

##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로제 불법 반입 급증 국가·반입경로별 통관 관리 모니터링 강화해야”

기준에 281건(95.6%)이 인도발로 확인됐으며 일본 70건(2.4%), 카자흐스탄 47건(1.6%), 중국 7건(0.2%) 등이 뒤를 이었다.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반입도 적지 않았는데 올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보류 건수는 501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일본발이 319건(6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125건(25.0%), 미국 21건(4.2%), 베트남 14건(2.8%)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중국 두 국가가 전체 여행자 휴대품 통관보류의 88.8%를 차지했다.

통 관 의원은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로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불법 반입은 인도, 여행자 휴대품은 일본에 집중되는 등 특정 국가와 특정 반입 경로를 통한 유입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해외직구와 해외 구매를 통한 불법 반입 시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유동되는 의약품, 건강 보조제, 제조·유통과 같은 비관세 물품을 확인하기 어려워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의약품 유입 차단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국가별·반입경로별 통관 관리와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민 기자 yyj@siminilbo.co.kr

## 국민의힘 “한성숙, 국정 이끌 자질 없다”...李大통령에 ‘지명 철회’ 촉구

韓, 청문회 직전 주책 처분  
李정권의 노골적 내로남불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한 후보자는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자질과 역량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시켜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청문회에서) 국민이 본 것은 국정 철학도, 비전도 아니었다. 이재명 정권의 노골적인 ‘내로남불’과 한 후보자의 ‘오만한 특권 의식’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후보자가 보여준 모습은 이재명 정권이 그토록 외쳐 온 공정과 정의가 얼마나 위상되었는

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너가’에 비유하고 불과 무덤 전에 있는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죄인조차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강변했다. 그런데 정작 행정부를 출판한 국무총리 후보자로는 ‘다주택자 마귀’를 버젓이 지명하는 이중 잣대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후보자는 검증의 칼날이 다가오자 청문회 직전 부랴부랴 주책 3책을 처분하고 시세 차익을 기부하는 등 알짜한 꼼수수 국민을 우롱했다”며 “국민은 청문회를 면피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을 원했다. 이 대통령의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면 한 후보자는 총리는 아닌 공자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농지회 위반과 불법 증축

의혹, 가족 간 편법 증여 의혹, 성남IC 정경호 의혹, 청담동 미용실 위장 증여 의혹까지 불법과 특혜 의혹을 평행한 국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며 “심지어 0.25는 복합이라 는 함양 미담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쯤되면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니라 함양 미담에 불법과 특혜 의혹까지 더해 종합선물세트”라고 호렷했다.

이어 “이처럼 무거운 의혹 앞에서 한 후보자는 고압적인 태도와 은근로 일관했다. 핵심 검증 자료 제출을 무더기로 거부하고 증인 채택까지 무력화하며 입법부 를 무시했다”며 “자로는 숨기고 증인은 모함, 청문회만 버티면 된다는 오만한 태도는 국민을 향한 정면 도전이자 국회를 우롱한 처

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청문회는 한성숙 후보자의 결격 사유인 더욱 분명한 죄행을 지켰다”며 “도덕성도 무너져, 자질도 부족해, 책임감도 지 갖지않을 수 없는 인물로 국공무리로 임명할 수 없는 건 국민이 무서리로 저지러서 이재명 정부의 또 하나의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국민이 반대하는 결격 후보자를 끝까지 임명하는 것은 형치가 아니라 특권이 인사가 아니라 오기”라며 “지금이라도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무는, 의혹, 은혜’ 한성숙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끝 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번 인사 참사의 모든 정치적 책임은 정적

으로 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철래 원내대표도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지금 한 장관이 앉아야 할 자리는 총리 인사청문회 기가 아니라 ‘도유참정’ 정세문화사태 청문회”라며 “위법 정권, 무는 정권. 한 장관은 총리 자격은 물론 장관 자격도 없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와 장관직에 동시에 고취하고 수사에 임할지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어 여야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및 곧바로 분회회에서 인사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용희 기자 dra@siminilbo.co.kr

## “대형유통업체 대금 지급기한” 김성민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성민 의원이 지난 26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 대금 지급 지연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한무역진흥기법’의 개정 공청회에서 관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8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저대입 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특대매입·위수탁 등의 거래에서 판매 마감일부터 9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물가·고금리 정가화 속에서 납품 대금 회수가 늦어지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인건비, 원자재 대금, 임대료 등 필수 비용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형유통법에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중대기업에 대상으로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대입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은 상품 수령일 기준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입 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특대매입·위수탁 등의 거래에 있어 대금 지급 기한도 판매 마감일 기준 현행 9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했다.

개정안은 형식적일 충분한 대기업과 대형 납품업체를 제외하고, 실제 보기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정책 효과가 집중되도록 설계했다.

이영민 기자 yyj@siminilbo.co.kr